

“금속노조 가입하자”, 10분 만에 과반 기업노조 탈퇴

18일, 경기지부 현대위아 인산지회 설립...7개 핵심요구 사항 발송, 단체교섭 준비 마쳐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 인산지회(지회장 윤호상, 아래 지회)가 11월 18일 경기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회는 창립 경과보고에서 조합원 166명, 가입대상 93%가 가입했다고 보고했다. 윤호상 준비위원장은 “지난 사흘 동안 기적이 일어났다. 아무도 하지 못 할 것 같던 금속노조 가입을 우리가 해 냈다”라며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자. 함께 금속노조로 가자”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동차 모듈을 생산하는 현대위아 인산공장은 3개 하청업체에서 18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지회는 11월 15일 주야 근무 교대시간에 “금속노조에 가입하자”라는 윤호상 준비위원장의 외침을 신호로 단 10분 만에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윤호상 지회장, 김범경 수석부지회장, 백이현 사무장과 업체별로 여병구(우수산업), 서기원(성

우), 김창훈(태광) 부지회장을 선출했다. 지회는 총회에서 임단협 요구안 설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배 노조 경기지부 부지회장은 축하 인사에서 “우리 노동자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라며 “투쟁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경기지부와 여기 모인 많은 동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여러 금속노조 지회와 연대단체가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현대모비스 화성지회는 핫팩과 초코바를, 현대모비스 아산지회는 비타민 음료를 가져와 지회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나눠 주며 힘을 북돋웠다.

ILO, ‘한상균 위원장 석방’ 한국 정부에 권고

“정부정책 반대하는 파업, 불법규정 안돼” ... 민주노총, “권고 수용,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국제노동기구(아래 ILO)가 한국 정부에 2015년 민주총궐기를 주취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했다.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영주 사무총장의 혐의에 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ILO 331차 이사회는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조 간부를 석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가진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고서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약 반대 총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불법파업 규정과 경총의 업무방해죄 고소·고발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수단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향후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ILO의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촛불항쟁, 나라다운 나라 만들 때까지”

18일, 한파 속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촛불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 “자유한국당 해체, 의원직 반납”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4.16연대, FTA 대응대책위, 빈민·장애인대회준비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촛불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1만 2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 청년들은 적폐의 주범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개헌 정국에서 “개헌이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아닌, 국민 참여로 기본권 강화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제시했다.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과 2기 특조위 구성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고, 적폐청산과 근본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각 부문 대표자들은 무대에 올라 대회사를 통해 “촛불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날까지, 촛불의 민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박근혜와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악 2대 지침 폐기, 백남기 농민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재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등 성과를 언급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당 소속 대통령이 국민의 항쟁으로 탄핵, 퇴진했다면 그 당은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마땅히 당을 해체하고 의원직을 사퇴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표자들은 “스스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큰 실망을 주고 있다”라며 한미 FTA 개악 강행, 광화문 차벽 재등장, 사드배치 강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위안부 아합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존재, 재벌개혁 자율개혁 둔갑, 노조 할 권리와 비정규직 철폐 요원, 개 사육값만도 못한 쌀값과 개방농정, 노점 탄압과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을 시정하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들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이기 때문에 가만있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많

은 분이 이제 진상규명이 될 텐데 왜 보채느냐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특별법만일 그대로 통과된다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법안 발의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었다”라며 “특조위 위원 구성안을 바꾸고 조사 권한과 수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민대회를, 빈곤사회연대는 빈민·장애인대회를, 4.16연대는 세월호 행진을 각각 벌인 뒤 16시 마포대교 앞에 집결했다. 각 단체는 마포대교 남단에 집결해 적폐청산 대행진을 전개하고, 자유한국당사 앞 규탄시위 등을 열었다. 자유한국당사 앞까지 행진한 농민, 빈민, 세월호 행진단 등은 ‘쓰레기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라고 쓴 쓰레기 봉투를 던지며 규탄했다.